

FIP-2016-0001 (통권 제226호, 2016.01)

외환보유액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ISSUE
PAPER

Contents

I . 검토 배경	1
II .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필요한 이유	4
1.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배경 및 필요성	4
2.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	5
III . 외환보유액이 적정 규모인가에 대한 검토	10
1.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주요 글로벌 기준과 비교	10
2.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비교	12
IV . 시사점	14
[첨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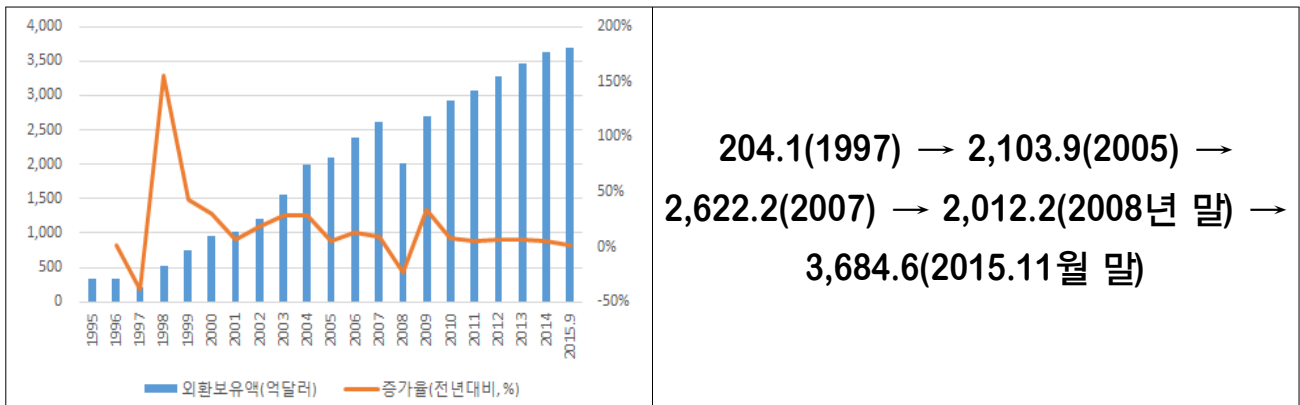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재정금융팀 추나현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173 FAX : 02-6234-5229 E-mail : na0108@fki.or.kr

I. 검토배경

- (현황) 한국은 2차례의 금융위기 겪으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
 - 외환보유액은 3,684.6억 달러('15.11월 말 기준)로 204.1억 달러('97외환위기), 2,012.2억 달러('08년 리먼사태 이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세계 7위 수준

< 외환보유액 추이 >

(단위: 억 달러)



* 자료 :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 구성) 유가증권(91.3%), 예치금(6.1%), 금(1.3%), SDR(0.9%) 및 IMF 포지션(0.4%) 등으로 구성('15.11월 말 기준)
- 유가증권은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 SDR과 IMF포지션은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수시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 * SDR은 실제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 않지만, IMF포지션은 실제 거래에 사용

< 외환보유액 구성 ('15.11월 말 기준) >



* 출처 : 한국은행

□ (문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現 규모가 적정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





- 외환보유액 축적에 따른 혜택만 있다면 다다익선이겠지만,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외환보유액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 이견이 존재

< 외환보유액 축적의 이익과 비용 >

외환보유액 축적의 이익	외환보유액 축적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변동 시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안정을 달성 · 유사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위기에 직접 대응 · 외환보유액 자체가 보험으로 기능해서 위기 시 낮은 비용으로 외화조달이 가능 · 국부의 증대를 가져와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액 축적 위해 시장에 개입 → 환율의 시장조정 메커니즘 저해 ·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므로 수익률 낮아짐 · 외환보유액 축적 과정에서 채권(외평채/통안채) 발행에 의한 이자 비용이나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 · 환율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음

- (외환보유액의 혜택) ① 외환시장 개입 통해 환율안정 달성, ② 유동성 위기에 대처, ③ 외환보유고 자체가 보험기능을 수행, ④ 대외신인도 제고
- (외환보유액의 비용) ① 낮은 운용 수익률, 외환보유액 축적 과정에서 ② 채권 이자 비용과 ③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④ 환율조작 의혹
- 특히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한 2011년(3,064억 달러)을 전후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

<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 >

 <p>SERI.org Knowledge Hub for Creative Solutions</p>	“현 상황에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하회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확대 기조는 적절”, 2010.11
 <p>현대경제연구원 Hyundai Research Institute</p>	“외환보유고가 경상 및 자본 수준은 상회하나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에 못 미침”, 2011.9
 <p>INTERNATIONAL MONETARY FUND</p>	“韓 외환보유액 충분… 추가 확충할 필요 없음”, 2014.4.18
 <p>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p>	“美 금리 인상해도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은 수준”, 2015.9

- ① 다른 신흥국보다 높은 안정성, ② 대규모 외화 유출입 막을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현재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시각 존재
- (높은 안정성) 신용등급 기관들의 한국 등급 상향조정 및 낮은 CDS프리미엄
 - *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9월)하여 '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AA-를 기록, 무디스(12월) 상향조정한 결과 역대 최고 단계인 Aa2 기록
 - * CDS 프리미엄이 신흥 11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수준(0.54%, 12월)¹⁾
-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며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하여 외국인 자본유입을 규제

< 거시건전성 3종 세트 >

구분	목적 및 내용	도입시기
외환건전성 부담금	(목적) 외화차입 유인 완화 (내용)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 부과	'11.8월
선물환포지션 규제	(목적) 은행의 단기부채 제한 (내용)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 제한	'10.10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목적)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 제한 (내용)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과 거래소득에 과세	'11.1월

- 반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불안요인을 점검해 국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
- (신용등급) 높은 등급 받았지만 외환위기로 신용등급이 급락한 경험
 - * 외환위기 직전 S&P와 피치에서 AA-, Aa3 등급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S&P는 국가신용등급을 10단계·무디스는 6단계·피치는 12단계 하향조정
-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외화 ‘유입’에 대한 규제만 있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
 - *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 미비
 - * OECD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15.5)
- 본 보고서에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현재 외환 보유액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해보고자 함

1) 대한상공회의소, 2015.12.15

Ⅱ.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필요한 이유

1.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배경 및 필요성

□ (축적 배경) 신흥국들은 과거 몇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액 축적을 위기의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축적

- 자본시장 개방한 신흥국은 ‘sudden stop’으로 외환 부족에 직면
 -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성장률과 금리가 높아 외환이 많이 유입되는데, 유입된 외환이 갑자기 유출(sudden stop)되는 경우 위기가 발생

< ‘sudden stop’에 의한 신흥국 위기 발생 >

신흥국의 위기 발생 경로	자본 유입 → 환율 하락 → 경상수지 악화 → 외채 의존 확대 → 대외신인도 하락 → 유입된 외환의 유출(sudden stop)
‘sudden stop’에 의한 과거 신흥국 위기	멕시코 외환위기(’94), 아시아 외환위기(’97), 러시아 디폴트(’98), 아르헨티나 금융위기(’99)

- 위기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액의 축적은 신흥국이 강력한 긴축 조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교훈
 -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을 막거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유입된 외환이 급하게 유출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책
- (필요성)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이한 경제 구조로 인해 신흥국은 위기발생 시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대응수단으로 외환보유액 축적이 필요
 -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지만 한국은 비교환성통화국(=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외환이 부족해질 경우 양적완화와 같이 화폐를 찍으면 되지만 한국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하며 외환위기에 노출됨
 - 한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소규모” 경제
 - 선진국에 비해 대외 요인에 영향 크게 받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서, 개인이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외환보유액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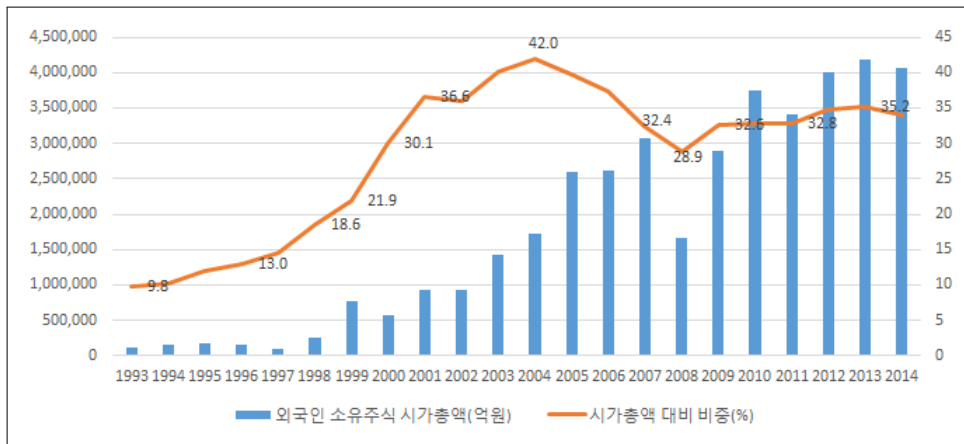
2.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

(1) 불안한 외국인 증권 투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08년 이후 '14년 까지 주식시장에만 약 238.5조 원의 외환이 추가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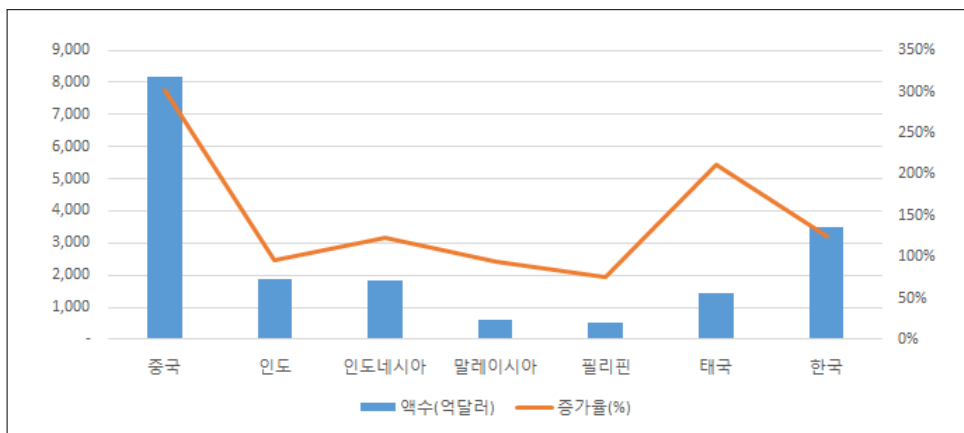
< 외국인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 및 비중 >



* 자료: 한국은행, 금감원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규모는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그 절대 액수 (3,477억 달러) 및 증가율(125%) 모두 큰 수준

<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규모('08년 대비 '14년 4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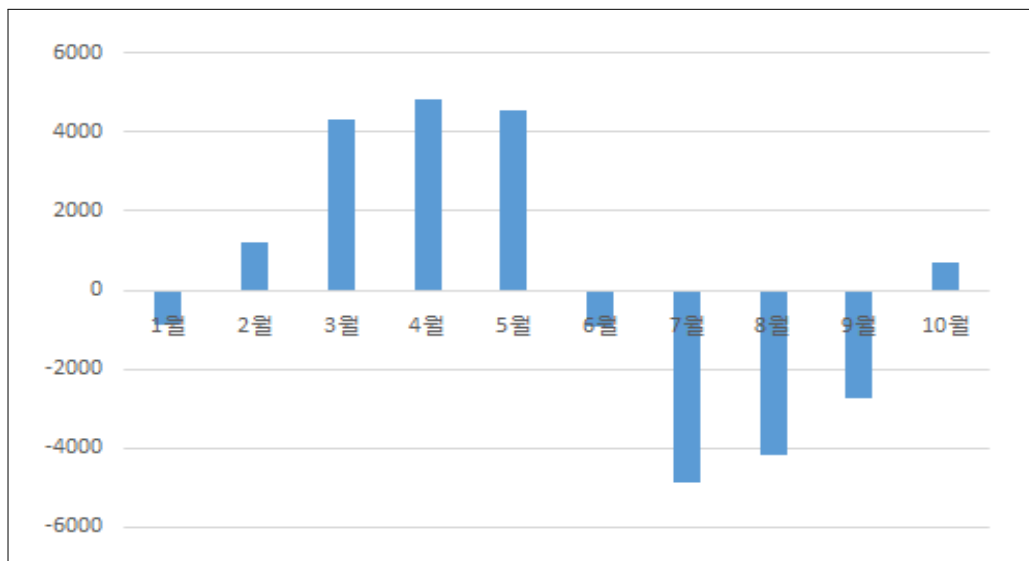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이와 같이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은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
 - 우리나라는 건전성이 양호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글로벌 투자자가 일시적인 자금을 parking하는 국가²⁾로, 변동성이 갑자기 확대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주식시장에서만 외국인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약 141.1조 원 감소('07년 대비 '08년)
 - 국내 주식시장에서 2010년 3.5조 원 순매수했던 유럽계 자금이 2011년 유럽 위기 때 1~7월 동안 6.2조 원 순매도로 전환³⁾
 - 올해 6~9월에도 외국인증권투자가 순유출(총 13.9조 원)되었는데, 4개월 이상 순유출된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

< 외국인증권투자 4개월째 순유출 >

(단위: 십억 원)



* 자료 : 금융감독원

2) 「금융시장 현황과 4가지 질의응답」,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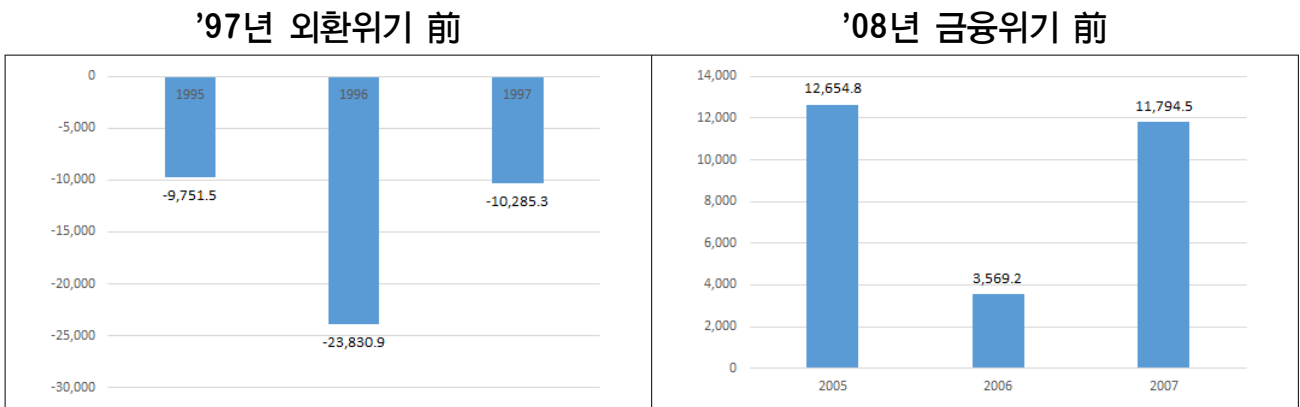
3) 「유럽 위기와 외환보유고 점검」, 현대경제연구원, 2011.9.14

(2)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라는 낙인효과와 대외 충격

- 견실한 국내 경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차례의 위기 겪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한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와 달리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였고 외환보유액 규모도 세계 6위로 견실한 상황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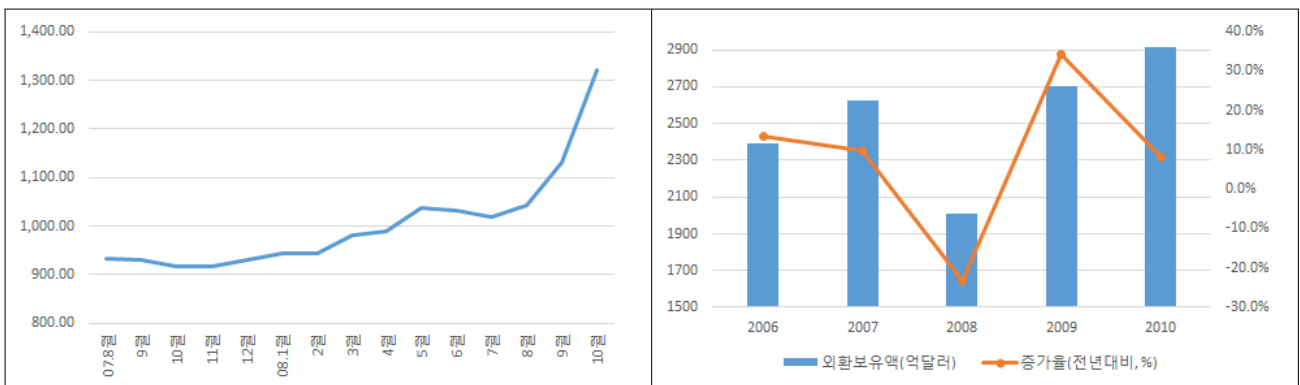
< '97년 외환위기 및 '08년 금융위기 前 경상수지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그림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41.6%, '07.8월 대비 '08.10월 평균 환율)하고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610억 달러, '07년 말 대비 '08년 말)하는 위기
 - 환율의 경우 변동성이 리먼사태 이전 0.34(G20국가 평균 0.40)에서 리먼사태 직후 1.69(G20국가 평균 1.07)로 대만, 말레이시아 등보다 크게 변동⁴⁾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원/달러 환율 및 외환보유액 추이 >



-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고 국내 경기가 튼튼했음에도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영향

4)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1

□ 국내 실물경제의 점진적 쇠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리한 대외 충격과 낙인효과가 더해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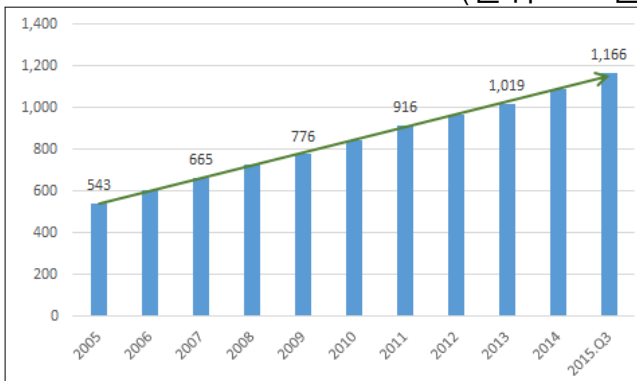
-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과 가계부채 등 민간 실물경제의 펀더멘털 약화
 - 신흥국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약 150%, 금융권 포함)·급증하는 가계 부채 등 민간의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 내포

*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의 신흥국 평균은 약 80%(美 금융조사국(OFR), '15.12)

- 성장동력 부재 등 실물부문 위기로 2~3%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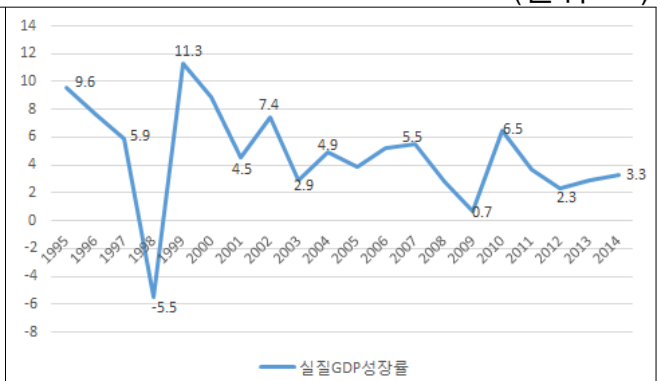
< 가계부채 추이 >

(단위: 조 원)



< 실질GDP성장률 추이 >

(단위: %)



- 이러한 상황에서 美 금리인상으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면 외환-실물 위기의 2중고에 시달릴 가능성

- 美 연준은 지난 16일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7년 만에 금리를 인상(0.25%p) 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유로지역과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불분명한 일본이 미국과 달리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
-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 미치지 않더라도 경제가 취약한 신흥국*의 위기를 통해 영향 미칠 수 있음

*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의 경우 43.5%에서 69.6%로, 태국의 경우 35.4%에서 38.7%로 과거 위기 때보다 증가('07 대비 '14.3분기)

- 충분한 외환보유고는 불리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외환위기의 불안이 퍼지는 것을 막고 실제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

(3)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중단

- 한미 통화 스와프 중단('10.2월)에 이어 올해('15.2월)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 통화 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하고 일본과의 기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함으로써 위기 넘겼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통화 스왑 >

구분	내용
주요 통화 스왑('08년 체결)	미국(300억 불), 중국(3600억 위안), 일본(700억 불)
통화 스왑 효과	협정 체결 후 금융불안에 대한 위기감 해소되면서 급등했던 환율 떨어지고 주가 상승
종료된 통화 스왑	(한·미 통화 스왑) '10년 2월 종료 (한·일 통화 스왑) '15년 2월에 14년 만에 중단

- 특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체결 자체가 건전성 증표로, 통화스와프 체결('08.10.30) 이후 환율이 안정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
 - *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로,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음

- 현재 6개의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중국(64조 원), 인도네시아(10조 7,000억 원), 아랍에미리트(5조 8,000억 원), 치앙마이 다자간 통화 스왑*(384억 달러), 말레이시아(5조 원), 호주(5조 원)
 - * 치앙마이 다자간 통화 스왑(CMIM) : ASEAN+3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여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며 2010.3월 발효됨
 - 그중 위기 발생 시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CMIM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역통화 기반의 통화 스와프임
- 통화 스와프는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 활용하는 임시방편인데, 한국은 위기 때마다 사전에 맺은 통화 스왑이 없어서 시장에 불안이 확산

Ⅲ. 외환보유액이 적정 규모인가에 대한 검토

1.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글로벌 기준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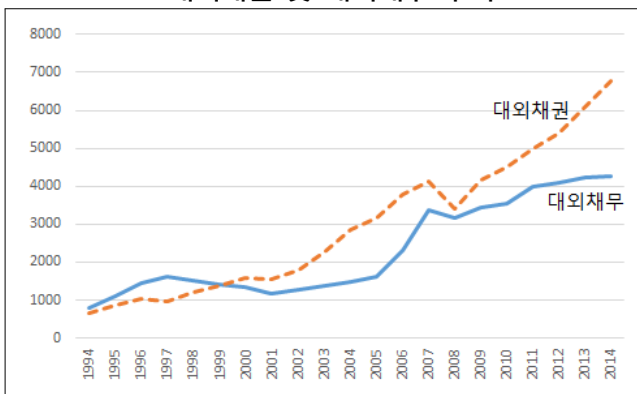
-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주요 글로벌 기준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과 기도티-그린스펀 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세 가지가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기준(1953년)은 ‘3개월 치 경상수입대금’을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로 보며,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주요 결정 논거
- 기도티-그린스펀 룰(1999년)은 ‘3개월 치 경상수입대금에 유동외채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며 국가 간 자본거래를 고려하지 않는 IMF 기준을 보완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00년대)은 ‘3개월 치 경상수입대금 + 유동외채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3분의 1’이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까지 고려

< 적정외환보유액 주요 글로벌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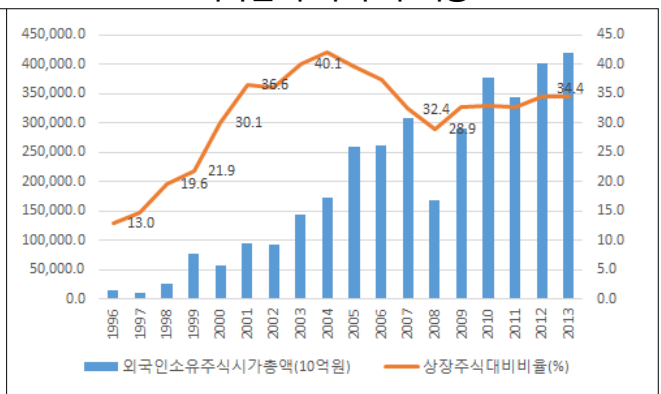
구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기도타-그린스펀 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의미	3개월 치 경상수입액	3개월 치 경상수입액+유동외채	3개월 치 경상수입액 + 유동외채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1/3*
특징	국가 간 경상거래만 고려	국가 간 자본거래도 고려	도피성·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고려

- 3가지 기준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
- IMF 기준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자본거래가 활발한 국가에는 부적절하며 기도티-그린스펀 룰도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한국에 부족

<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추이 >



<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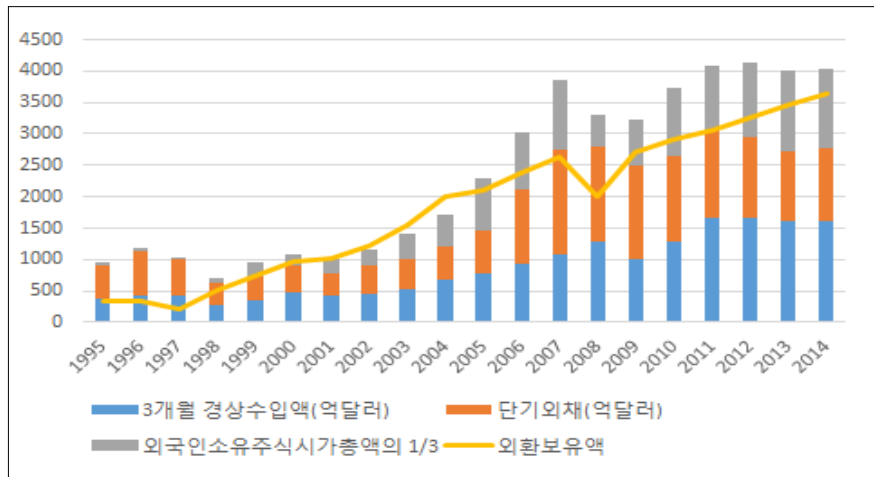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개월 치 경상수입액과 단기외채는 커버하지만, 외국인증권투자는 커버 못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못 미침
-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개월 치 경상수입액을 적정외환보유액으로 보는 IMF 기준과, 여기에 단기외채를 합한 기도타-그린스펀 률은 충족하는 수준
- 3개월 치 경상수입액과 단기외채에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금의 1/3까지 합한 BIS기준에는 약 409.5억 달러 못 미치는 수준('14년 말 기준)
- 3개월 치 경상수입액은 연간 (상품수입액+서비스지급액)의 1/4, 유동외채는 해당연도 말의 단기외채,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해당연도 말의 외국인 소유 주식 시가총액을 해당 연도 평균환율로 환산한 금액
-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경우 통상 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1/3 혹은 ②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액의 20%로 계산, 여기서는 ①번임

< 적정외환보유액 주요 글로벌 기준 >

구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기도타-그린스펀 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약 1,609억 달러	약 2,762억 달러	약 4,045억 달러

< 실제 외환보유액과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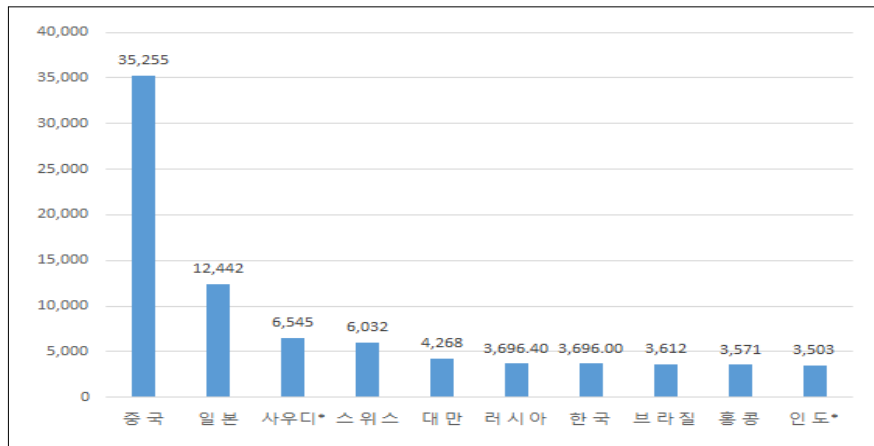
- * 한국은행·금감원의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 각 연도의 적정 외환보유액과 실제 외환보유액의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를 참고
- 유동외채의 경우 ‘장기외채 중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오는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 단기외채의 2배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실제 보유액은 적정 외환보유액(5,198.3억 달러)에 약 1,563억 달러 못 미치는 수준

2.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비교

-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7위이지만 높은 수준의 대외거래 규모, 낮아지는 순위,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추이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한국(3,696억 달러)은 중국(35,255), 일본(12,442), 사우디아라비아(6,545), 스위스(6,032), 대만(4,263), 러시아(3,696.4)에 이어 세계 7위 규모('15.10월 기준)

< 주요국 외환보유액 순위('15.10월 말) >

(단위: 억 달러)



* 2015.10월 말 기준

** 자료 : IMF,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 (대외거래규모) 높은 무역의존도 및 자본시장개방도를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의 절대액수 비교만으로 多少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존재
-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77.88)는 외환보유액 10위 국가 중 3위('13년)
 - *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그 국가의 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총액의 비율

< GDP 대비 무역의존도(외환보유액 10위권 국가) >

국가	GDP 대비 무역의존도(2013)	국가	GDP 대비 무역의존도(2013)
중국	41.57	러시아	44.84
일본	32.64	한국	77.88
사우디	69.16	브라질	21.68
스위스	59.64	홍콩	349.88
대만	110.97	인도	37.79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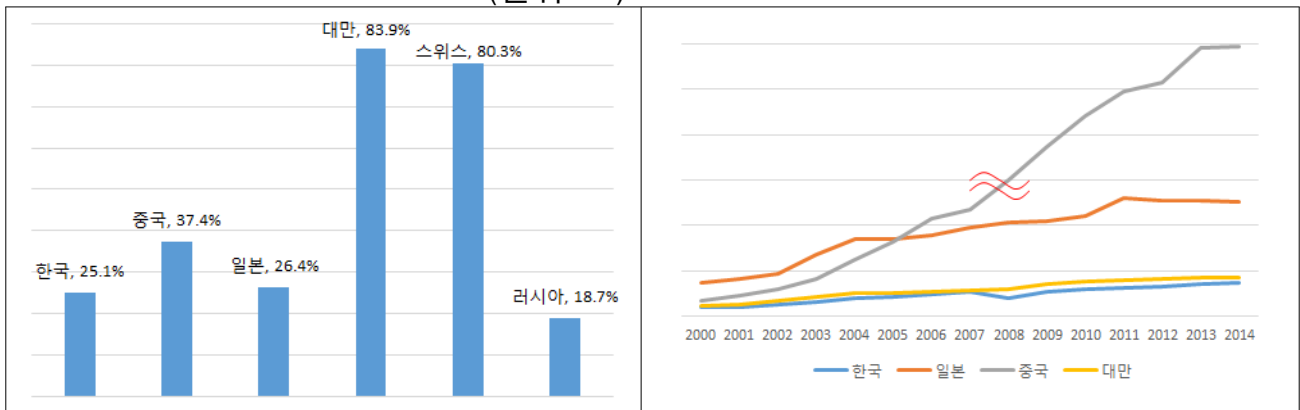
- 자본접근성지수(CAI)는 세계 12위(2009년 기준)로 중국, 일본, 대만은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 자본접근성지수(CAI:Capital Access Index)란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거시경제·금융 관련 법과 제도·주식, 채권시장 발달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낮아지는 순위) 2005년도에 세계 4위 규모였으나 인도, 사우디 등이 더 큰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함에 따라 7위(2011년 이후) 수준을 유지

< 과거 외환보유액 순위('05~'14) >

연도(12월 말 기준)	순위
'05	4위
'06	5위
'07	6위
'08	6위
'11~	7위

-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25.1%)은 중국(37.4%), 일본(26.4%), 대만(83.9%) 등에 비해 낮고, '00년대 이후 이들 국가 역시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림

< 주요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 <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추이 >
(단위: %)



* '14년 기준

** 자료: 한국은행, IMF

IV. 시사점

-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조금 못 미쳐 아직 외환보유액의 과다보유로 인한 비용을 걱정할 단계는 아님
 - 30%대의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과 환율변동성 등 감안하면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로 BIS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경상거래와 단기외채의 합보다는 많지만 외국인 투자자금까지는 커버하지 못하므로 자본 이탈의 경우를 고려할 필요
- 美 금리 인상이 장기에 국내 외국인 자본을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는 수준인지 검토 필요
 - 과거 美 금리인상 후 두 차례의 위기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기에 대비

< 과거 美 금리 인상과 한국에의 영향 >

시기	美 금리인상	여파
'94.1~'94.2	3 → 6%	('97) 아시아 외환위기
'04.5~'06.7	1 → 5.25%	('08) 글로벌 금융위기

-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축적 외에도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을 통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망 확충이 필요
 - CMIM와 같은 다자간 통화스와프, 지역통화협력 등을 통한 국제금융안전망 갖추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

[첨부]

(단위: 억 달러)

구분	(a) 3개월 치 경상수입액	(b) 단기외채	(c) 외국인 소유 주식시가총액의 1/3	(a)+(b)+(c) 적정 외환보유액	실제 외환보유액
1995	380.2	514.0	72.3	966.5	327.0
1996	427.3	703.0	63.0	1193.4	332.3
1997	420.7	584.0	36.3	1041.0	204.1
1998	281.8	360.0	61.1	702.9	520.4
1999	345.4	385.0	214.6	945.0	740.6
2000	468.8	438.0	166.7	1073.6	962.0
2001	424.6	353.0	242.0	1019.5	1028.2
2002	457.8	445.0	248.2	1151.0	1214.1
2003	533.2	478.0	398.6	1409.9	1553.5
2004	668.5	544.0	504.2	1716.7	1990.7
2005	782.0	669.0	847.0	2298.0	2103.9
2006	935.9	1182.0	915.9	3033.7	2389.6
2007	1087.1	1659.0	1105.1	3851.2	2622.2
2008	1296.4	1490.0	504.7	3291.1	2012.2
2009	996.1	1487.0	755.5	3238.5	2699.9
2010	1283.4	1365.0	1085.3	3733.7	2915.7
2011	1653.0	1398.0	1031.6	4082.6	3064.0
2012	1657.1	1280.0	1191.0	4128.1	3269.7
2013	1614.0	1118.0	1280.0	4012.0	3464.6
2014	1609.1	1153.0	1288.3	4050.4	3635.9

* 출처 : 한국은행, 금감원의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